

건축물 높이 제한 등 도시계획 정비

전주시, 건물 높이·지구단위계획·개발행위 관련 등 미래 전주 성장 제도 완화 검토키로

전주시가 40m 이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과 공원 주변 고도지구 층수 제한, 원도심 프랜차이즈 입점 제한 등 각종 규제를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는 건축물 높이 제한 등 도시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요소들을 민선8기 성장 지향 정책기조에 맞춰 개선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현재 검토 중인 정비 대상은 건축물 높이 제한, 녹지지역 규제, 고도지구 기준,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 등이다.

시는 기존 건축물 높이 40m 이상의 개발행위 시 이행해야 했던 도시계획위원회 높이 심의를 과감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건축위원회 심의, 공동주택 100세대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관위원회 심의, 지구단위

계획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때 높이 심의가 이뤄지는 만큼 이를 따로 심의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행정절차 이행기간 단축 △건설비용 절감 △위원회별 상충으로 인한 행정절차 지연 등 여러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그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가도록 만든다는 계획이다.

시는 다른 도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게 잡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용적률을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허용 범위내에서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용적률이 완화되면 노후 건축물이 많은 지역의 특성상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해져 도시의 안전성과 미관이 확보되는 것은 물론이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새 건물들이 늘어나면서 친환경

경 도시로 한 발 더 다가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주차장과 공원 등 부족한 기반 시설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대규모 개발사업 주체가 기반 시설을 설치해 기부채납할 경우 추가로 용적률 높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시는 1997년 결정된 공원 주변 고도 지구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시설(공원) 일몰제와 같은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불합리한 고도지구에 대해 새로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원도심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문화관광산업에 저해되는 요소를 발굴해 개선하는 방향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기로 했다. 영화의거리와 전라강영 주변 등에서의 프랜차이즈 입점 제한을

완전히 푸는 방안 등이 신중히 검토될 예정이다.

시는 민선8기 성장 지향 정책기조에 맞춰 이런 내용을 골자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 이를 토대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녹지지역의 개발행위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정비) 변경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배회곤 시 생태도시국장은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강간경제도시 전주 성장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조례 개정이 필요한 용역을 상황과 높이의 폐지 등은 올 하반기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고, 고도지구와 원도심 지구단위계획 개선 검토 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시민들이 변화를 피부로 실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 여성농민들 "농산물 가격 대책 마련하라" 전북여성농민연합 등 3개 단체는 18일 전북도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는 당장 CPTPP 기입을 철회하고, 농산물 가격 하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주시보건소, 맞춤형 운동처방 '비만관리프로그램' 운영

전주시보건소는 시민들을 위한 비만관리프로그램으로 '비만탈출'과 '일상이 다이어트'를 운영하면서 대상자별 맞춤형 운동처방을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비만탈출 프로그램은 체지방율이 남자 20%, 여자 28% 이상인 시민을 대상으로 주 2회씩 5주 동안 총 10회에 걸쳐 맞춤형 영양교육과 전문적인 지도를 통한 근력 및 유산소 운동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1기 프로그램을 지난 9일부터 운영 중이다.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직장인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다이어트 앱을 활용해 고혈압과 당뇨 등 성인질환을 예방하는 '일상이 다이어트'도 운영 중이다.

일상이 다이어트는 다이어트를 원하는 성인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참여 신청 후 휴대폰에 다이어트 앱을 설치한 후 일상생활 중에 다이어트를 실천하면서 1개월 단위(최대 3개월)로 건강증진센터에서 점검을 받으면 된다.

보건소는 점검 결과를 통해 체중 감량자로 확인되면 감량 성공용품을 제공해 스스로 다이어트를 실천하고 건강관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비만관리 프로그램 참가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보건소 건강증진센터(063-281-8577~9)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훈 기자

안전한 학교 주변 환경 조성 '앞장'

전주시 완산구, 31일까지 학교 주변 위험 요소 점검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김병수)는 개학을 맞아 학생들이 안심하고 즐거운 등하갓길이가 될 수 있도록 이날 31일까지 학교 주변 위험 요소들을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완산구는 전라북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민·관 단체와 함께 편의점과 음식점, 노래방 등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19세 미만 술·담배 판매 여부 △정소년 출입·고용금지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청소년 보호 계도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및 사고 위험지역에 대한 불법 주차차 단속도 한다. 무인 단속카메라와 이동식 단속카메라를 이용해 학교 주변을 순찰하고, 등하교 시간에 불법 주차차를 못하도록 해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학교 주변 식품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유기농산물·식품 사용 여부 △무표시·무허가 제품 판매 여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

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쾌적한 통학 환경을 위해 학교 주변에 무분별하게 부착된 불법 광고물 정비에도 나선다. 학생들에게 유해한 내용의 현수막이나 전단지, 통행에 지장을 주는 입간판과 에어라이트 등 불법 광고물들을 정비하기로 했다.

김병수 완산구청장은 "학교 주변에 집중적인 점검 및 정비를 통해 유해 요인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쾌적한 학교 주변 환경을 조성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시 완산구, 취약계층 긴급지원 대상자 발굴 지원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김병수)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가 안심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음 달 30일까지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굴한다고 18일 밝혔다.

완산구는 고시원, 여인숙, 쪽방 등 여름철 풍수해에 취약한 곳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가구 외에도 공공요금 체납, 단전, 단수가구 등 위기상황이 예상되는 고위험군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완산구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몰라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지역 내 자생단체와 복지관, 병원, 학교, 주민 등에게 안내를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동 주민센터 '찾아가는 복지상담' 등을 통해 취약가구 생활실태 일제 조사에도 나선다.

완산구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생계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등 긴급지원금으로 11억9600만 원(1859건)을 지급했다.

하반기부터는 생계지원금이 4인 가구 기준 130만4900원에서 153만6300원

으로 인상되며, 재산기준도 한시적으로 완화돼 위기가구에 대한 보다 폭넓은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병수 완산구청장은 "여름철 풍수해 재난에 노출 위험이 있는 주거 취약가구, 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 등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바쁘게"면서 "우리 주변에 저소득 위기가구가 소외되지 않도록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피서철 전북서 수난사고 속출

2019~2021년 총 931건 수난사고 발생해 53명 사망
전체 수난사고 중 절반 6~8월에 집중... 8월 가장 많아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무더위와 열대야로 인해 계곡·해수욕장 등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변을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피서객의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8시 8분께 남원시 노암동의 요천에서 물놀이 하던 A(57)씨가 물에서 나오지 못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사고 다음 날인 16일 오전 7시께 남원시 승사교 다리 밑에서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다.

그는 사고 당일 지인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러 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14일 오후 4시 40분께 완주군 운주면의 한 하천에서 물놀이객 9명이 물살에 떠내려가는 사고가 났다.

친인척 관계인 이들은 고무보트와 튜브를 타고 물놀이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30여분 만에 무사히 구조됐다.

앞선 지난 9일 오후 1시께 부안군 변산반도국립공원 직소폭포 인근에서 물놀이를 하던 B(62)씨가 숨졌다.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B씨는 이날 산악회 회원들과 함께 이곳을 찾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27일에는 진안과 무주의 경계에 있는 금강 지류의 다리 아래서 물놀이를 하던 C(56)씨와 그의 아들 2명 등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경찰은 형제가 먼저 물에 빠져 아버지가 구조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최근 3년(2019~2021년)간 도내에서는 931건의 수난사고가 발생해 53명이 숨졌다.

전체 수난사고 중 492건(52.8%)이 6~8월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8월이 233건, 7월 143건, 6월 116건 등이다.

발생 장소별로 보면 바다가 290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천 242건, 저수지 175건, 호수 28건, 계곡 12건 등의 순이었다.

사고 유형별로는 익수 사고가 전체의 38.8%인 369건을 차지했다.

이처럼 수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놀이 시 반드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하고, 수심이 깊거나 유속이 빠른 곳에는 접근해선 안 된다고 도 소방본부는 당부했다.

소방 관계자는 "물놀이 전에는 준비운동을 충분히 하고 구명조끼 등 안전 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며 "익수자를 발견하면 함부로 구조에 나서지 말고 주변에 큰 소리로 알리고 119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뉴시스



전주매일 캠페인